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1994. 4.

申 相 振(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李 惟 眞(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頂上會談 개최 背景과 結果	1
가. 背景	1
나. 結果	3
2. 東北亞와 韓半島 情勢에 미칠 影響	9
가. 東北亞 情勢에 미칠 影響	9
나.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	13
3. 韓國의 考慮事項	14

1. 頂上會談 개최 背景과 結果

○金泳三 대통령은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여 일본(3.24, 26)과 중국(3.28)의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 바, 금번 韓·日 및 韓·中 頂上會談 개최 背景과 結果는 다음과 같음.

가. 背景

○금번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 중국 방문은 北韓 核問題가 1년 이상 난항을 보이고 있고 국가간 經濟競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음.

- 따라서 북한 핵문제와 경제협력 문제가 이번 한·일,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었음.

○북한이 핵문제를 對日 修交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본내 조총련의 對北 送金이 북한 핵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는 바,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共助體制를 공고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음.

○중국이 북한에게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唯一한 強大國이라는 점에서 김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에게 적극적인 役割 수행을 촉구하고자 하였음.

-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발표(1993.3.12)한 이후, 중국은 韓半島의 非核化를 지지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음.)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二重的 態度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半減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음.

○ 한국은 국제경제의 地域主義化 추세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으로 해외시장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새로운 대외경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바, 김대통령은 이번 巡訪을 통해서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과의 經濟協力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음.

- 한국은 개도국의 도전과 선진국의 통상압력 사이에서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본, 중국과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냉전이후시대 새로운 地域秩序 구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國際的 位相을 제고하고,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시대에 대비 4강에 대한 均衡外交를 모색·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 최근 동북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역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지역국들의 군비경쟁 움직임이 지역 안정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바, 지역 다자안보협

1)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제약에 따른 것임. 둘째, 중국은 북한이 단기간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방과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셋째,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대미 견제 등 중국의 대외 영향력 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음.

의체 구상을 실현시킴으로써 地域 不安要因들을 사전에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나. 結果

○이번 김대통령의 일본과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이들 양국과 經濟協力關係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既存立場 고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1) 北韓 核問題

○호소카와 日本 總理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양국간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되었음.

- 양국은 북한에 대한 재사찰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되, 북한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할 경우 일본은 유엔의 일원으로서 헌법의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한·미·일 3국간 협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다소의 異見이 있었음.

-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였으나,
- 중국은 북한을 說得하는데 限界가 있다는 이유로 남북한,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등 4개 당사자간 대화(四方三邊 對話)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였음.
-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반대하며, 패트리엇 미사일의 한국 배치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가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음.²⁾

2) 經濟協力問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新經濟協力機構」의 설치 및 운영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첫 회의를 4월 2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함.

- 일본은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한국이 부품, 소재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하였음.
- 이를 위해 일본은 한국의 기술자 훈련, 일본인 기술고문의 한국파견, 일본기업의 對韓 기술이전을 유도하기로 약속함.

2) 냉전이후시대 중국은 미국을 최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중국은 역내 주둔 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거나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임. 이에 대해서는 신상진,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동북아질서,”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04 (1993.8), p. 90 참조.

- 또한 한, 일은 공공 및 民官합동부문 건설시장 진출, 초고속 통신망사업 협력,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신경제협력기구」 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 投資協力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수출보험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기업이 합자투자를 위해 제3국에 공동진출할 경우 투자비의 자국기업분을 수출보험으로 지원할 것에 합의하였음.
-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로 상정됨으로써 당초 목표로 하였던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 확보는 原論的인 수준에 국한되었음.
-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産業協力委員會」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교류를 가일층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는 전자교환기, 자동차, 항공기, 고화질 TV 등 4개 분야 分科委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들 4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합의는 양국간 경제적 相互補完關係를 증진시킬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합작투자 등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 소득세 등에 대해 二重課稅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중국 投資가 대폭 확

대될 것임.³⁾

○ 이와 관련, 한·중은 通商長官 會談을 별도 개최하여 1997년 까지 양국간 교역규모가 2백 80억달러로 확대되고, 한국의 대중 투자가 4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 한·중간 경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標準化協定」을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음.

○ 또한 한국은 중국에 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4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 관계가 돈독히 유지·발전되도록 하였음.

- 금년도 중국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延吉비행장 확장사업, 黑龍江省 철도 복원사업, 山東省 용구항 확장사업, 天津市 남대강교 건설 등 한·중 경제교류 확대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3) 多者協力問題

○ 김대통령은 동북아 강대국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여 文化, 環境 및 地域經濟協力 등 한·중·일 3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냉전이후시대 동북아 新秩序 모색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과시하였음.

3) 1993년말 현재 한국의 對中 투자는 1,042건, 9억 6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 금번 김대통령의 일, 중 방문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은 漢字 표준화 사업과 東洋醫學 공동 연구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원칙 합의하는 동시에, 환경보존에 대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였음.

- 특히 한·중은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한국은 중국의 공식 협조하에 중국 동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발굴, 조사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한국이 民族史的 正統性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아울러 금번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일 3국간 동아시아의 廣域的 協力の 가능성까지 모색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한·중·일 3국 정상은 아·태지역 안보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와 서방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이와 관련, 開放的인 지역 경제협력체 형성에 대해 3국이 이해를 같이 하였음.
- 또한 중국의 가트 가입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⁴⁾

4) 일본은 호소카와 총리의 방중시(1994. 3. 19-21) 중국의 가트 가입지 요청에 동의하였음.

4) 韓·日間 過去事 問題

-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둘러싼 정부간의 외교적 갈등을 지양하고 未來指向的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그러나 종군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귀국 문제 등 아직도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일본측의 반성과 사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 인지는 계속 과제로 남아있음.

- 호소카와 總理는 사할린 동포의 永住歸國을 위한 지원책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한·일·러 3국간 협의를 진행시킬 것임을 밝힘.⁵⁾

- 從軍慰安婦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일본측의 태도에 관계 없이 독자적인 피해자 생활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으며, 일본의 반성·사죄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一任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호소카와 수상은 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를 예의 검토 하고 있다고 언급함.

5) 1993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제의 조기 해결에 합의하고 현재 실무협의회가 진행 중임. 한·일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사할린에 파견한 바 있으며 (1994.1.11~13), 현재 사할린 한인단체와 사할린한국교육원 협조로 실시중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일간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 東北亞와 韓半島 情勢에 미칠 影響

가. 東北亞 情勢에 미칠 影響

1) 軍事·安保

- 금번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경색된 局面을 緩和하고, 對話에 의한 北韓 核問題 解決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
 - 김대통령의 訪中 이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결의안 채택문제를 논의하는 등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強硬制裁 논의가 제기되었음.
 - 對話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는 북한이 아직 核彈頭를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북한이 핵문제를 대서방관계 개선을 위한 協商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중국의 主張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번 김대통령의 일본, 중국 순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國際共助體制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한국과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음.⁶⁾

6) 금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천명하였는 바, 북한이 단기간내에 핵문제에 대한 의혹을 완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조총련에 의한 대북 송금(연간 약 6-10억달러 상당)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중국 지도부의 발언을 감안할 때, 대화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이 실패할 경우 중국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을 것임.
-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공조체제는 장기적으로 양국 간 安保協力을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와 관련, 李炳台 국방장관이 일본과의 군사협력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공식 방문할 예정(4월 하순)임.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再査察 등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을 수락할 경우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 관계개선을 위한 접촉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對서방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影響力이 더욱 擴大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능한한 북한 핵문제를 대화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는 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음.
 - 한국이 더 이상 대일관계에 있어서 過去事를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는 바,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국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域內 役割增大를 용이하게 할

전망임.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간 정치·군사 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根本的 變化」를 가능하게 하는 變數가 될 가능성이 있음.⁷⁾

-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한국 國防部의 이양호 함참의장이 수행하였으며, 중국은 금명간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 武官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음.

- 한·중 정상회담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 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중간 협력관계가 심화·발전될 전망이다.

- 「문화협정」에서 역사적 사실 歪曲部分을 시정하기로 하였는 바, 이를 계기로 한·중간 정치적 信賴關係가 증진될 전망이다.

○ 아울러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냉전이후시대 새로운 地域秩序 구축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역내 多者安保協議機構 형성 가능성을 한단계 제고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軍備競爭을 완화하는 등 잠재적 지역분쟁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域內 安定維持에 도움을 줄 것임.

7) 중국은 현재까지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 편향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경제적으로는 남한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왔음. 이와 같은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균형외교정책에 대해서는 「錢其琛關於國際形勢問題的報告」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1期 (1993. 11), p. 88 참조.

2) 經濟

- 한국은 더 이상 過去事와 관련한 일본의 도덕성을 문제삼지 않고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도 한국의 國際競爭力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따라서 향후 한·일간 경제관계가 보다 호혜적이고 고차원적인 협력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産業協力委員會」 설치를 통해 양국 공통 관심 산업부분에서 제품의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 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가 制度化될 전망이다.
 - 한·중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한국기업의 對中 投資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唯一한 強大國이라는 점에서, 이번 金大統領의 중국 방문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開放으로 誘導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役割을 促求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지난 1978년이래 정치개혁은 유보한채 점진적 經濟開放을 통해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바, 북한도 중국식 開放路線을 踏襲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북한을 吸收統一 하지 않고 북한과 미·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는 바, 이는 중국의 北韓開放 誘導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번 김대통령의 순방결과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와 서방의 市場開放 壓力에 대처하기 위해 共同步調를 취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는 바, 域外國家에 대해 개방적인 지역 경제협력체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한·중·일 3국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 가능성이 제고될 것임.

나.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

○ 금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의 對北韓 정책변화 설득 노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계기로 북한의 對南姿勢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影響力을 유지·확대하고자 하고 있는 바, 북한 핵문제가 對話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또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南北韓 頂上會談 개최를 위한 중재역할 수행을 자임할 가능성도 있음.

- 남북한관계 진전을 위한 중국의 仲裁努力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硬直된 자세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남북한간 分斷狀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나 중국의 대북한 影響力 行使에 限界가 있다는 점과 이번 김대통령의 순방외교로 인하여 북한이 國際孤立을 더욱 느끼게 되면 북한의 서방 및 남한에 대한 자세가 오히려 경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⁸⁾ 이번 한·일, 한·중 정상 회담이 南北韓 關係進展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韓國의 考慮事項

○일본은 유엔의 對北 制裁조치가 취해질 경우 自衛隊를 동원하여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일본정부가 결정하는 자위대의 업무 성격과 수준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향후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일본 社會黨의 반대로 일본의 대북 制裁조치 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일본 국내정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향후 동북아질서가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域內 新秩序 형성과정에서 중·일과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實利를 극대화 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한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추구를 지지하는 대신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북한은 실제로 1992년 8월 한·중 수교로 인한 국제고립이 심화된 이후 남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음.

○한·일 양국이 對美 경제관계에서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對日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미·일 경제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경제적으로 밀착하거나 일본의 입장에 同調할 경우 對美 경제관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또한 이번 순방외교에 의해 이룩한 成果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과 政治·軍事協力關係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전통 우방인 미국과의 불필요한 摩擦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과의 軍事交流는 당분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 국한시켜야 할 것임.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인 바, 한국은 북한의 政策變化를 誘導하기 위해 중국내 改革派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軍 지도부 등 중국내 보수파는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중국 保守勢力에 대해서도 외교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중국에서는 개방정책 채택이후 地方政府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바, 한국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吉林省과 遼寧省 등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계증진 노력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
 - 중국 東北 3省과의 유대관계 증진은 북한의 개방정책 유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國際社會의 制裁措置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임.

- 중국과 북한은 한·미 팀스피리트훈련 再開와 패트리엇 미사일의 한국 配置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障礙要因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 한국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패트리엇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금번 김대통령의 일, 중 訪問에도 불구하고 한·일, 한·중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바,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政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과거사를 더 이상 정부차원에서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에는 종군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문제 등이 현안으로 남아 있는 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공식 차원의 대일 幕後 外交가 필요함.
 - 중국이 遠洋防禦戰略을 채택 大洋進出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 바, 향후 한·중간 海上摩擦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중 어업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해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음.

- 海外市場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調整關稅를 철폐하도록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 따라서 한국은 한·중간 경제적 補完關係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影響力을 확대하기 위해 競爭하고 있으며, 역내에 軍備競爭과 領土紛爭 등 마찰요인이 잠재해 있는 바, 한국은 지역불안 요인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統一實現을 위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해 지역 다자안보협의체가 조기 형성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役割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東北亞秩序와 南北韓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 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統一情勢分析 94-0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4년 4월 일
發行日 1994년 4월 일
